

# 尹, 김건희 '명품백 의혹' 입장 밝힌다... '지지율 반등' 주목

**KBS와 국정현안 대담 녹화**  
민생회복 위한 부처 칸막이 해소  
교육·노동·연금 개혁, 北 문제 등  
국민에게 설명... 오는 7일 방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국방송공사(KBS)와 국정 현안에 대한 방향 제시 등 신년 대담 사전 녹화를 진행했다.

특히 설 연휴 전인 오는 7일 밤 국민에게 전해질 이번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등이 있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장범 KBS 뉴스9 앵커와 대담을 진행했다. 이는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약 1년 6개월 만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한 지난해 새해에는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논의된 신년 기자회견이나 김치찌개 간담회가 아닌 이번 녹화 대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을 선택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최대한 정제된 발언 등을 통해 신년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대담을 통해 올해 신년사부터 강조해왔던 민생 회복을 위한 부처 칸막이 해소와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온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등의 이슈를 비롯해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 문제까지 경제, 외교,

안보 등의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당 측에서는 야권의 공세에 관련 사건을 '몰가 공작'으로 규정하는 등 반박을 펼쳐왔다.

윤 대통령이 침묵 대신 해명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유

감 표명과 함께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할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으로 제22대 총선을 70여일을 앞두고 20%대로 떨어진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지난 2일 한국갤럽이 1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였다. 지난해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63%였다.

윤 대통령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 아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 2주 차 27% 이후 9개월 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 사전 녹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며, '용산 전체주의'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

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의 정식 기자회견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해 11월 도어스테핑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후 언론의 공개 질문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언론과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이라며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스스로 양두구육 정권임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각본을 짜고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대담은 '재갈 물린 방승'을 앞세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녹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성년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윤 대통령이 만약 정부 여당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난치병 환자 세포·유전자치료 길 열렸다

**첨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1년 후 시행**  
첨단재생의료 임상대상 범위 확대  
환자가 희망때 세포치료 가능해져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세포·유전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번 첨생법 개정안 통과로 세포·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임상연구 대상자 제한이 사라지게 됐으며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연구개발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첨생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첨생법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지만, 내용이 매우 제한적인 탓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그동안 세포·유전자치료제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이거나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 한해서만 치료목적 임상연구로 투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줄기세포 치료 등을 받기 위

해 해외 원정길에 나서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가 넓어진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만 확보되면 임상에 참여한 환자가 아니어도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세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첨생법 통과로 인체세포등 관리업(인체세포 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영업자)의 허가기준과 유사한 수준의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인체세포등 관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 환자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 업계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우선,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의 임상 가속화되고 상업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크다.

심사기간이 단축되면서 임상에 필요

한 시간이 줄어들고 상용화 절차가 간소화된다. 세포치료제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조건부 품목허가나 신속심사제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져 세포치료제 등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 일정이 앞당겨 질 수 있을 전망이다.

장명호 지아이셀 최고임상과학고문은 "첨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초기암 및 수술 후 환자분들도 세포·유전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기대했다.

또한 개정된 첨생법이 시행되면 재생의료에 사용되는 세포치료제 위탁개발 생산(CDMO)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는 "차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세포치료제를 활용해 중증·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임상과 사업화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사업이 활성화 되면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친환경선박 기자재, 中 수출 증대 기대감

» 1면 '中 친환경선박 강공에'서 계속

이를 고려했을 때 중국은 친환경선에 대한 수요 및 건조 경험치가 국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특히 중국은 LNG 선적중 발전기 고장으로, 호주 LNG 터미널을 일주일 동안 폐쇄시키는 등 안정적인 선박 생산 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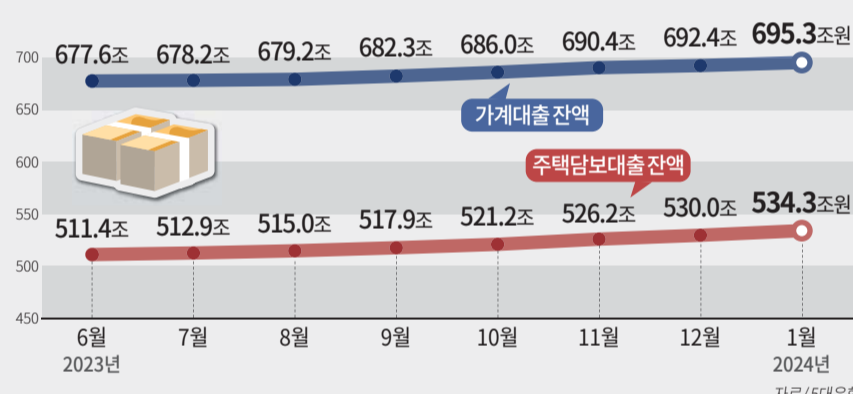
력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중국산 LNG 운반선이 6개월 동안 호주 항에 입항 금지되는 조치를 당했다. 해당 사건은 안정적인 LNG 운반선을 양산할 수 있는 한국 조선업의 기술 우위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국내 조선 기자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친

환경 조선기자재 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친환경 선박기자재 브랜드를 론칭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친환경 기자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사가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중국의 발전 속도보다 더 빨리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5대은행 가계대출 잔액 추이



## 이달 말 DSR 강화 앞두고 가계대출 증가

5대은행 가계대출 잔액 2.9조 늘어  
총 695조3143억... 9개월째 증가세

금융당국의 우려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9개월째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은 주택대 갈아타기로 금리가 낮아지며 수요가 늘었다. 이달 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한도가 낮아질 수 있어 막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314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 전보다 2조9049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5월부터 9개월째 증가했다.

◆ 5대은행, 주택대 한달간 4.4조원 ↑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해서다. 5대은행의 주택대대출 잔액은 534조3251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4조4329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늘어난 주택대(3조6699억원)보다 증가폭이 컸다. 특히 이달 늘어난 주택대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이용이 늘고 주택대 갈아타기 서비스로 금리가 하락하며 증가했다. 5대은행을 포함한 전체 은행에서 취급한 주택도시기금은 지난해 11월 3조7000억원에서 12월 3조8000억원으로 매달 늘었다.

여기에 주택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금리를 낮추며 주택대 증가를 부추겼다. 지난 1월 기준 5대 은행을 통해 주택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청한 차주는 1만4783명으로 신청액수는 2조5337억원에 달한다. 주택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기존 대출 잔액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주택대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경쟁이 가열되며 낮아진 금리 때문에 주택대매를 위한 대출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스트레스 DSR' 앞두고 막차수요 예상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대매매심리를 자극시켜 주택대 증가를 이끌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전 조건이 까다로워 수요가 없을 것이라 예상과 달리 신청 첫날 접속장애크를 일으킬 정도로 신청이 폭주했다.

또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또한 일시적으로 대출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트레스 DSR은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5년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를 대출자에게 가산금리로 부과해 한도가 감소한다. /사유리 기자 yul115@